

전국 대학가 의대 정원 유치 경쟁 본격화

FOCUS 서남대 의대 폐과 결정... 그 후

〈속보〉서남대 구 재단 측은 의대 폐과를 결정하자 전국 대학가의 '의대 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보 6월 8일자 1면, 2면, 3면, 4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서남대 구 재단이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재단은 이를 통한 매각자금을 활용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강도 높은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발표 직후 대학가의 모든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서남대 '의대 정원'이다.

▲국내 대학가, 서남대가 가진 '의대 정원'에 눈독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총 정원'으로 규제를 받는다.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이 있어도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정원 배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이 회수될 경우 예외가 된다.

회수된 정원을 교육부가 어디에 배정하느냐에 따라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시 말해 서남대 의대가 2018년부터 폐과된다면 이를 대체할 타 대학이 의

대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국 대학가 '의대 유치 전'이 불길에 탄 화발유처럼 강력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 41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중 의예과가 폐과되는 사례는 서남대가 처음이다 보니 대학 간 의대 유치경쟁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의대 유치를 추진하는 대학은 목포대·순천대·공주대·창원대 등 4곳이다.

이들 대학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여건을 내세우며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열 올리는 '이웃' 전남

이 중 전남의 의대 유치는 지역 정치권부터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순천대와 목포대의 의대 유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은 의료사관학교와 같은 '자치의대 유치'를 박 의원은 '통상적인 의대 유치'라는 공약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남이 전국 광역단체(세종시 제외) 중에서 유일하게 대

의대 유지하려는 대학은?

현재 목포대·창원대 등 4곳 인력 부족한 지역여건 내세워

정치권이 나선 전남지역

새누리 이정현, 순천대 국민의당 박지원, 목포대에 각각 의대 유치 공언

충청·경남지역도 사활

공주대 "충남도내 도서지역 많아 의대 신설시 의료공백 해소" 창원대 "경남지역 의대 없어"

학병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해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박 의원은 "목포·신안지역의 경우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대는 20년 전부터 의대유치를 추진해왔으며 10억 원이 넘는 의대설립기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정원을 회수할 경우 지역사회의 협력해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행간의 의미가 노출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새만금

8일 인천 송도 경원호텔에서 한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와 중국 의인민대외우호협회(회장 리사오린)가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새만금을 소개하고 있다.

▲충청·경남도내 의대 유치 사활

공주대도 인근 서해안 도서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공주대 관계자는 "충남지역도 서해안에 도서지역이 많다"며 "공주대가 의대를 신설한다면 의대 졸업생들을 10년간 도서벽지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긴 창원지역도 의대 유치가 사활을 걸었다.

창원대 관계자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창원시 광역인구가 110만 명에 달하지만 지역 내 의대가 한 곳도 없다"며 "창원대가 의대를 설립하면 지역 내 산업단지를 고려해 산업전문

의료인력 양성 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학 간 경쟁은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정원(49명) 회수를 완료하는 내년에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의대 신설이 본격화될 경우 4개 대학 외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형 기자

“옛 재단의 의대 폐과 결정 절대 수용불가”

서남대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

서남대가 '구 재단의 의대 폐과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남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대 구 재단이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남대는 "교육부가 구 재단의 정상

화계획서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했다"면서 "이로 인해 서남대 임시이사회의 구성원은 물론 서남대 인수의지를 가진 여러 재정이여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서남대가 발표한 것처럼 작성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결국 비리로 얼룩진 구 재

단에 학교를 되돌려주기 위한 모종의 음모로 의심되며,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교육부와 구 재단을 상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서남대 김정안 총장은 "구 재단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는 계획서에 불과할 뿐"이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수차례 명시한 기준(설립자의 교비회령금에 대한 현금 선확보, 자금의 명확한 출처, 연도별 현금투자계획 등)을 교육부 스스로가 무력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형 기자

도내 금융기관, 전북 한은 화폐수급업무 재개 촉구

전주시에 이어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 등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공식 촉구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주우체국, KB국민은행 전북지역영입국 등 8개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 측에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다수 도내 금융기관들은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문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은 이번 공문에서 지난 6월 1일자로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업무는 재개됐지만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업무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과 전북본부의 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폐수급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업무로,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 및 인력 개편으로 인해 전북본부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됐다.

화폐수급업무가 통·폐합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금융기관들은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약 80~100km 정도 떨어진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비용발생과 위험 부담 등을 안고 있다. 또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전주는 국내 3대 지방은행이자 인천과 경기, 충청, 호남을 통틀어 서부권역 유일의 지방금융지주사인 전북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지만 원활한 화폐수급이 어려워 지역 내 자금 과부족 해소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발휘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한국은행이 전북본부와 함께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됐던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업무에 이달부터 재개시킨 반면 전북본부는 대상에서 제외하자 도내 금융기관들의 불편해소와 전북도민들의 자존감 회복, 호남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해 왔다.

특히 시는 김승수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지역 금융권과 상공회의소, 정치권 등에서 한국은행의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김영재 기자

“새누리의 의장 양보 매우 다행스러운 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새누리당의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직 양보에 대해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원칙의 승리이고, 민심 앞에 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 박원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사지탄"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정문관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총선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환영한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저희 더민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협상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바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국회의원직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민본자치의 중심! 순창군의회!

-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천년의 장맛! 화려한 경관!
맛과 멋의 고향
순창으로 오세요!!!